

빚을 나눠 갚는 중에 채권이 팔리면 무엇이 달라지나

2026년 7월 8일부터 신속채무조정 이행 중 채권의 양도가 제한된다

금융위원회 의결·고시, 현행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과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를 대조해 채권양도 제한의 대상·시점·남은 위험을 정리했습니다.

발행	2026.08.25	연번	2026_60
읽는 시간	7분	작성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연구소의 판단

연구소는 이번 개정을 채무조정 약정의 안정성을 높인 조치로 본다. 채무자가 약속대로 갚는 동안 채권자가 바뀌어 추심과 신용평점에서 예기치 않은 불이익을 받는 경로를 막았다. 다만 보호 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이행 중 채권으로 한정되므로 다른 조정, 약정 종료 뒤와 적용 전 양도까지 같은 보호를 받는다고 읽어서는 안 된다.

CONTENTS

이 글의 순서

- 01 연구소의 판단
- 02 확정된 사실
- 03 왜 이런 구조인가
- 04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 05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 06 지금 할 일
- 07 갈림길
- 08 함께 읽을 것
- 09 근거와 검증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채권은 2026년 7월 8일부터 양도가 제한됩니다. 새 규정은 채권자 변경에 따른 추심 강화와 신용평점 하락 위험을 줄이지만 모든 채무조정과 모든 양도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01 · 확정된 사실

확정된 사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1일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이행 중인 채권의 양도를 제한하는 감독규정 개정을 의결했고, 7월 2일 고시했습니다.

개정 규정	감독규정 제6조의2	신속채무조정 중 채권 양도 제한
고시	2026년 7월 2일	금융위원회고시 제2026-27호
시행	2026년 7월 8일	현행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지원 대상	연체 30일 이하 또는 연체우려자	신속채무조정
지원 내용	최장 10년 분할상환	연체이자 감면·약정이자율 조정
2025년 지원자	5만 3,659명	65%는 연체 미발생

개정 사유는 신속채무조정 중 채권이 매입추심대부업자 등에게 넘어가면서 성실상환 중인 채무자가 추심 강화와 신용평점 하락 위험을 겪는 문제를 막는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신속채무조정 지원자가 5만3,659명이고 65%는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채무자였다고 밝혔습니다.

신속채무조정은 연체기간 30일 이하 또는 연체 전 연체우려자에게 최장 10년 분할상환, 연체이자 전액감면과 약정이자율 30~50% 인하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는 의결·고시 즉시 시행이라고 예고했지만, 현행 국가법령정보센터는 금융위원회고시 제2026-27호의 시행일을 2026년 7월 8일로 표시합니다. 이 글은 현행 규정의 시행일을 따릅니다.

02 · 왜 이런 구조인가

왜 이런 구조인가

채권양도는 빚을 없애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바뀌면 새 채권자가 남은 원금과 약정상 권리를 승계합니다. 채무자는 양도 통지를 받은 뒤 누구에게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조정은 원금·이자·기간을 바꾸는 별도 약정입니다. 채권이 양도되더라도 유효한 조정 약정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양수인이 약정을 어떻게 인식하고 추심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분쟁과 불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새 감독규정 제6조의2는 그 갈등을 사후 해결하기보다 신속채무조정 이행 중 채권의 양도를 제한합니다. 채무자가 조정 약정을 지키는 동안 채권자 교체 자체를 막아 약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보호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신속채무조정이 아닌 사적 조정·다른 제도, 약정 실효 뒤, 시행 전에 이미 이뤄진 양도까지 모두 금지하는 일반 규칙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03 ·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은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해 합의하고 약정대로 갚는 채무자입니다. 2025년 지원자 5만3,659명 가운데 65%는 연체가 발생하기 전 또는 연체우려 단계의 채무자였습니다.

채권이 양도되면 신용정보에 채권자 업권이 달라져 보이거나 추심 연락 주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카드사 채권이 매입추심대부업 채권으로 바뀔 경우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무자는 양도 통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두 곳에 갚아서는 안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원채권 금융회사에 현재 채권자, 조정 약정의 유지 여부와 납부계좌를 확인한 뒤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2025년 지원자	53,659명	신복위 신속채무조정
연체 미발생 비중	65%	금융위원회 발표
단순 환산	약 34,878명	53,659명 × 65%, 실제 집계 아님

04 ·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01 · 적용 범위

신속채무조정 이외의 사적 채무조정과 다른 제도에 같은 양도 제한이 적용되는지는 별도 규정을 봐야 합니다.

02 · 시행 전 양도

2026년 7월 8일 전에 이미 양도된 채권은 이번 신설 규정만으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03 · 약정 실효

미납 등으로 신속채무조정 약정이 실효된 뒤의 양도 가능성과 추심 조건은 약정과 현행 규정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04 · 공시

금융회사별 채무조정·채권매각 실적의 표준 공시는 예고됐으며 실제 공개 형식과 비교 가능성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05 · 지금 할 일**지금 할 일****국민**

- 신속채무조정 약정서, 납부내역과 채권양도 통지를 한곳에 보관합니다.
- 양도 연락을 받으면 신용회복위원회와 원채권 금융회사에 현재 채권자·납부계좌·약정 유지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 확인 전에는 문자에 적힌 새 계좌로 임의 송금하거나 두 곳에 중복 납부하지 않습니다.

금융회사

- 양도 대상 채권을 추출할 때 신복위 신속채무조정 이행 상태를 필수 차단 항목으로 둡니다.
- 오양도가 발견되면 채무자와 신복위에 즉시 알리고 납부기록·신용정보를 원상 정리합니다.

당국

-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실적과 채권매각 주요내용을 같은 정의로 공시합니다.
- 양도 제한 위반, 원상회복과 신용평점 정정 사례를 정기적으로 공개합니다.

갈림길**채권양도 제한이 다른 채무조정과 반복 매각까지 넓어지는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현행 개정은 신복위 신속채무조정 이행 중 채권을 겨냥하고, 반복 매각 제한과 공시표준은 별도 후속조치입니다.

A

대상 유지
신속채무조정 밖의 채무자는 약정 중에도 채권자 변경 위험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B

보호 확대
다른 조정과 재매각까지 조건을 넓히면 채무조정 약정의 안정성이 커지지만 금융회사의 채권관리 선택은 줄어듭니다.

어디를 보면 아는가 · 금융위원회의 채권추심·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금융회사별 채무조정·채권매각 공시와 감독 규정 후속 개정을 확인합니다.

함께 읽을 것**4개의 연결 지식**

넥서스 브리프 은행이 연체채권을 상각·매각하면 빛은 없어지나 ↗

금융제도 채권양도와 추심 ↗

금융제도 채무조정 제도 개관 ↗

피해구제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

근거와 검증

확인한 사실·숫자 8건

01	1차 · 신속채무조정 이행 중 채권 양도 제한 개정안이 2026년 7월 1일 금융위원회 의결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원문 열기 ↗
02	1차 · 금융위원회고시 제2026-27호, 개정 조문은 감독규정 제6조의2 금융위원회 2026년 7월 2일 일부개정고시 원문 열기 ↗
03	1차 · 현행 감독규정 시행일 2026년 7월 8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 원문 열기 ↗
04	1차 · 신속채무조정 지원대상은 연체 30일 이하 또는 연체우려자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의 신복위 제도 참고표 원문 열기 ↗
05	1차 · 최장 10년 분할상환, 연체이자 전액감면, 약정이자율 30~50% 인하 위 동일. 신속채무조정 지원내용 원문 열기 ↗
06	1차 · 2025년 지원자 53,659명, 연체 미발생 채무자 65% 위 동일. 금융위원회 집계 원문 열기 ↗
07	1차 · 채권양도 통지와 대항요건의 기본 구조 민법 제450조 원문 열기 ↗
08	파생 · 53,659명의 65%는 약 34,878명 53,659×0.65의 단순 환산. 공식 인원 집계가 아니므로 본문에서 파생으로 표시

추적 예정	금융회사별 채무조정·채권매각 공시, 양도 제한 위반과 원상회복 사례, 반복 매각 가이드라인의 실제 시행 범위를 확인합니다.
정정 이력	첨부분 연번 NB-2026-074를 실제 공개 순서에 맞춰 NB-2026-060으로 바로잡았습니다. 개정 규정의 시행일을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표시에 따라 2026년 7월 8일로 정정했습니다.
면책 고지	이 글은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의 분석이며 금융위원회·신용회복위원회·금융회사의 공식 입장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개별 채권의 효력과 납부의무는 약정·통지·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